“소상공 활력자금 지원”

민주 안호영 도지사 경선후보, ‘일상 회복 종합지원 패키지 정책’ 발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후보가 250l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 회복 종합지원 5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후보가 전 도민에게 10만원권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활력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일상 회복 종합지원 5대 패키지’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상 회복 종합 지원 5대 패키지’ 발표를 통해 ▲전 도민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경제활력 자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료 특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14개 시·군 및 민간이 참여하는 ‘내삶 지키미 연대안전기금’을 조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호영 후보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출 후 1년간은 전북도가 이자 전액과 대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겠다”면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10년간 무담보 대출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북에서 설계한 일상 회복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기자

‘편히 잠드소서’…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추모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의 노제가 열린 25일 전북대학교서 추모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테마가 좌우”

신영대 의원, 윤 당선인 새만금 기업 유치 관련… “문 정부에서만 50건 유치 성공”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와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새만금의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새만금에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가 중요한데 현재 인수위의 흐름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발언에 대해 “말에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과거 대통령들도 기업 유치를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주제로 50건의 기업 유치가 성공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경협단지를 만들어 ‘차이나밸리’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무협의나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전북 금융중심지 등 지역 공약 사업들에 대해 약속을 꼭 지켜달라”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소상공 지원 전담조직 설치”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ESG 미래기업 유치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젊고 유능한 경제 일꾼’으로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실천 약속을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토종 뿌리 기업의 지속 성장, ▲ESG 미래기업 유치 등을 통한 군민이 풍요로운 경제정책을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면서 “창업, 경영, 교육, 마케팅 등 관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자본 유출을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물품구매, 용역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역화폐 유통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현실화 인상분을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외부방문객 지역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이어, “10년 이상 된 토종·뿌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양조성을 위해 ‘지역 산업·상공인 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조례를 통해 공공구매, 공사, 용역 등에 대해 고창지역 기업·상공인 우선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토종·뿌리 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뿌리 기업 성장팀을 신설하고, 맞춤형 R&D 및 공정혁신, 인력수급과 복지까지 선순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리스타트업(재창업)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ESG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전기장비, 선박·자동차·항공기 부품 등 첨단 ESG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장기과제로 전력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력에너지 관련 선도기업을 유치해 군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심덕섭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토종·뿌리기업, 미래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 더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기자·고창=김영식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와 경선 불가”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현 군수 경선후보는 3명

“부동산 투기·비리 의혹 후보와는 경선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25일 “개혁과 혁신 공천이 헛구호에 그친 민주당 공천 경선에 더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징계 청원 된 권익현 후보를 4인 경선후보자에 포함했다”며 “저는 비리가 알려진 후보와의 경선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8면〉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부안군수 경선 후보로 권익현·김상곤·김성수·김종규 등 4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성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25일 현재 경선 후보들은 3명으로 단축됐다.

김성수 예비후보는 “부도덕한 일이 경선이라는 포장으로 교묘히 가려지는 것은 군민에게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도덕한 후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민주당의 오만을 군민 이름으로 저항하고 올바른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익현 예비후보는 “선거철을 맞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용 네거티브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기초의원 3~4인 중대선거구 전면 확대를” 진보당 전북도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회는 ‘기초의원 3~4인 중대선거구 전면 확대’로 정치개혁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온 중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기능성 식물 신소재융합센터 유치”

강용구 도의원 예비후보

강용구 더불어민주당 남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25일 남원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기능성 식물 신소재융합센터’와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작물 스마트팜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강 후보는 “기능성 식물 신소재 융합센터와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작물 스마트팜 단지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네덜란드의 World Horti Center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소재 융합센터와 스마트팜 단지 사업은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신소재 개발 및 일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성·약용 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남원의 100년 먹거리 토대가 될 것으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사업 내용으로 ▲원료 생산공정 표준화, 기능성 지표 함량 분석 등을 위한 신소재융합연구개발(R&D), ▲실증 연구 제공, ▲바이오 융합 소재를 위한 미래경영인 양성, ▲비즈니스 모델 형성, ▲전시?체험 공간, ▲첨단 Aeroponics 플랫폼을 갖춘 스마트팜 단지 등이 마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어, “신소재융합센터는 사업비 200억원, 스마트팜 단지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총 42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R&D, R&DB 집적화를 통해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최소 2,000억원)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덧붙여, “융합센터와 스마트팜 단지 사업은 기술 창업형 및 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고부가가치 작물로 인한 농가의 수입증대 및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들이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지자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내달 2일까지 사직해야’

30일까지 궐원 통지 있어야 지선과 동시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